

## 教授의 研究 활성화를 위한 제안

朴 相 燮  
(서울大 外交學科)

### 1. 들어가는 말

研究와 教授는 대학의 양대 기본임무로 알려져 왔다. 즉, 대학은 한 사회가 독립적으로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고급지식을 생산해 내고 동시에 이러한 고급지식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생산되는 데 필요한 고급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두 가지 책임을 맡고 있다.

국가적 독립을 말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한 국가사회가 자신의 생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知識—이 지식은 한 사회가 자신의 상황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지식과 자연의 장애를 극복하고 나아가서는 자연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 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을 어느 정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점도 그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大學은 한 국가의 존립 여부 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근데 세계정치 속에서 독립된 국가로서 출발하게 된 것은 일제로부터의 광복 이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대학의 출발도 그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일제로부터의 광복이 1945년에 이루어졌고 독립국가로서의 공식 출범이 1948년부터의 일이라 하더라도 실제 의미있는 독립국으로서의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진 것은 그보다도 한참 뒤의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그 본연의 모습을 갖추고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도 역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이 그동안 고급인력을 생산하여 사회 각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공급하는 작업은 상당히 성공한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고급한 지식 그 자체의 독자적 생산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는 아직 獨自的 知識生產을 위한 하부구조의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기에 필요한 고급지식은 대체로 외국에서 생산된 것을 차용·소개하는 방식으로 공급되었다.

그러나 일정 단계의 수준을 넘어서는 고급지식의 경우, 기술민족주의의 상황에서 외부로의 유출을 꺼리는 각국의 정책 때문에, 또한 차용의 결과가 항구적 의존상태를 낳는다는 점에서 단순한 차용을 통한 지식의 공급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은 상황에 이른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대학이 스스로 고급한 지식을 생산해 내는 임무에 관련된 문제가 최근 들어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바로 이 점은 대학의 研究機能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지난 몇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양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하였다. 이것은 인구의 급증에 따른 高等敎育의 수요와 직결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수요에 따른 공급확대라는 측면에서 이루 어진 대학의 양적 팽창이 과연 질적 발전을 수반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 사실이다. 교육여건도 물론이더니와 연구 여건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열악한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질적 발전을 저해한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지난 20~30년간 우리 사회의 政治環境은 대학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대단히 부정적 영향을 끼쳐온 것으로 지적된다. 즉, 대학들은 학생지도의 문제에 휘말리게 됨으로써 본연의 임무인 연구의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정치문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또한 기술민족주의 시대에 있어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경착되면서 대학이 제자리를 찾아 본연의 임무에 열중해야 한다는 自省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의 제고와 함께 대학 내에서 研究投資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고 또한 사회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의 제고는 첨단 과학 기술의 생산과 관련하여 상당히 높아가고 있고 이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연구지원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人文·社會 분야에서의 연구지원은 상대적으로 취약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연구활성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2. 研究費

교수들의 연구활성화 작업은 좀처럼 보면 이들이 다른 문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이

추진하는 연구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마련해 주는 작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사항은 연구비의 문제이다.

연구비란 엄격히 정의한다면 연구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제 경비를 말하는 것이다. 이 연구비는 研究의 性格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연구비의 공여자가 원하는 특수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위한 연구비이다. 이것은 흔히 용역연구비로 불리운다. 다른 하나는 연구자 자신이 선택하는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순수한 의미의 연구비를 말한다.

다른 한편 연구비는 사용용도와 관련하여 경비조달형, 노력보상형 및 급여보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마지막의 급여보전형은 많은 대학에서 월급의 일부로 일정액을 정기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대학교수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는 데 있어 최소한 필요로 한다고 여겨지는 생계비에 대한 보조를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히 말해 연구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것은 논외로 한다.

대부분의 용역연구의 경우, 실제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물론 그 작업에 소요되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순수한 개인적 연구의 경우, 연구비는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경비지급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로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실시하는 '자유공모과제 연구비 신청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예산내역에는 연구자의 활동비를 전혀 계상치 않고 오직 소요경비만으로 연구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교수들이 개인적인 학문적 관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연구보다는 노력보상을 인정해 주는 용역연구 쪽에 더욱 관심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용역연구의 가치가 순수연구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수 기초학문 분야의 연구를 회피하게 만드는 계도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연구비가 과연 어떠한 성격의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어떤 불변의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논거에 바탕을 둔 해당 전문집단 내

의 지폐적 견해가 규범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 대학사회 안에서 의견을 모으는 조직적 작업이 아직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관련되는 연구비 지급기준이 주축이 되어 대학사회 내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비의 성격을 확립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비와 관련하여 우리는 研究費의 規模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공계 연구비의 경우 연구에 필요한 기자재, 연구보조원의 규모 등과 관련하여 거액의 연구비가 소요되는데, 이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제고되어 있어 실제로 대규모의 연구비가 지급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인문·사회계의 경우 그러한 객관적 측정이 어려우므로 연구비 규모를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研究費 供與機關이 정해 놓은 기준을 따르는 것이 편행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관행이 큰 문제없이 통용되는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때 연구에 진정하게 소요되는 비용—그 것이 노력에 대한 대가이든 아니면 실제 경비이든 간에—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이 점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연구비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연구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이 큰 의심없이 통용되지 않았던가 하는 의심도 생겨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교수사회에서의 진지한 검토도 시급한 일 중의 하나라 하겠다.

### 3. 人文·社會 분야 研究振興의 특수성과 중요성

위에서 인문·사회계열의 특수성이 부분적으로만 지적되었는데 우리는 이 인문분야의 연구에 대한 지원 문제를 좀더 부각시켜야 할 이유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인문·사회계열의 연구가 직접적 효용의 면에 있어서 자연계의 경우보다 덜 가시적인 결과를 낳아 그동안 연구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정도가 낮았기 때문이다.

주지 되듯이 인문학은 문화현상과 인간의 모든

행위—가치의 창출, 윤리, 법률, 제도, 제도의 운용방식 등 인간의 삶에 관련되는 모든 것—to 반성적 차원에서 그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 效用性의 면에서 여타 학문들과 성격을 달리한다. 즉, 인문학은 대상에 직접적으로 관계하여 특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학문들처럼 직접적으로 유용성을 산출하지 않는다.

이러한 까닭에 가시적 효과를 전제로 하는 用役性 연구는 각 연구자가 수행해 온 연구와 동떨어진 과제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오히려 연구의 축적을 저해하고 그 질을 저하시키기 쉽다. 따라서 인문학 분야에서의 연구지원은 개별 연구자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생성된 문제가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돋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인문분야 중에서도 기초분야에 해당되는 연구들은 한 사회가 자신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해당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과연 우리가 어떠한 지식을 그리고 왜 필요로 하는가 하는 根本的 문제,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基本戰略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은 사회 전체의 시각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4. 講義 부담과 研究 활동

연구분위기 조성과 관련하여 연구비 지급의 부족에 대한 호소가 일차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 또한 없지 않은 게 현실이다. 즉, 많은 적은 간에 대학교수들은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일정한 양의 교수와 연구 책임을 수행한다는 데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조달을 넘어서는 노력보상형의 추가적인 연구비 지원 요청은 도덕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이러한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쉽게 논박할 수 없는 논리적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학교수들이 한 학기 세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련되는 학문분야의 새로운 연구추세를 계속 추적하면서 강

의를 충실히 할 경우 강의 외의 자신의 순수한 연구업적을 냉기 어려운 게 설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구비 증액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지만, 강의부담의 경감에 대한 요구 또한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 개개인의 교수들은 연구비를 탈 경우 연구비에 자신의 생활급을 반영하고 대신 자신이 봉직하는 학교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시간만큼 강의부담을 면제받는 한편, 동시에 (잔여 연구경비=overhead cost 제도를 통해) 학교에서 나오는 급여를 면제된 시간에 강의를 할 대체강사의 급여로 전환하는 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물론 우리 대학에서는 아직 한번도 시도된 바 없는 생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도입 및 실시까지에는 상당한 시간과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는 아직 소속직장에서의 급여를 대신할 수 있을 만큼 큰 규모가 아님이 현실이다.

이러한 제도가 아직 경착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연구비 지급기관이나 수혜자 모두가 연구비를 실제 연구에 필요한 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적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실제로는 단순히 생활비에 대한 보조 이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갖게 만든다.

여하튼 간에 현행의 강의 부담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구는 개개인 교수들의 추가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가 실제 대학의 정상적인 업무로 이해된다면 단순히 추가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작업의 결과로 연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研究誘引을 위해서는 경비지원의 방식만을 떠하기보다는 연구에 물두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식에는 앞서 말한 강의시간 경감 외에 현재 일부 사립대학에서만 실시중인 안식년제의 일반적 도입을 강력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 研究振興을 위한 下部構造의 확충 : 圖書館 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투자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는 최근에 와서 협장조사 및 의견조사의 연구도 많이 증가되었으나, 기본적으로 문헌-이론 연구가 대중을 이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 및 정보로서의 문헌수집이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이공계의 연구에 있어서 실험을 위한 기자재의 확보가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는 상당히 일반화되었으나, 인문·사회계의 연구를 위한 '기자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의 자료 역할을 하는 방대한 文獻 資料가 필요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거의 외벽에 가까운 도서관 시설이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학들은 研究用 圖書館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많은 경우 도서관에 대한 인식은 수험생을 위한 독서실 이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수험생을 위한 독서공간의 확충이 아니라 연구자들을 위한 자료의 수집 저작고, 그리고 첨단의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센터로서 도서관을 인식하고 이러한 연구를 위한 하부구조 확충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연구는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수공업적 단계에 머물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연구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시설이 어떤 기관에 의해서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와 관련되는 최신의 해외정보를, 그것도 저극히 일부분이나마, 개인적으로 개인적 비용과 노력을 바탕으로 남보다 빨리 구득하는 사람이 연구에 있어 가장 앞서는 것처럼 되는 것이 상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빨리 쫓아간다고 해도 외국에서 생산되는 知識의 消費者 이상이 될 수가 없고 독자적인 지식생산자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공계의 학문도 마찬가지이지만, 인문·사회계의 경우도 어떤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외국에서 생산된 지식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빨리 이 단계는 넘어서야 다음의 獨自的 生産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축적되어 온 지식을 대규모적으로 수집·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개인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는 작업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최근 들어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학위를 소지하고 귀국하였다. 이들 대부분이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정착하는데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나 외국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와 같은 생산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연구를 위한 시설의 전면적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6. 연구비의 公共性 제고와 研究業績 평가

앞의 논의에서는 불충분한 연구여건이 주로 강조되었지만, 이러한 주장이 대학 외부 사회에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연구자들 쪽에서도 일정한 노력을 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지원되는 연구비가 단순히 연구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實際 研究遂行을 위해 오직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보여야 하고, 다른 하나는 수행된 연구작업에 대한 자체 내의 評價作

業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쉽게 수용될 전망은 밝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번째의 것을 위해서는 각 대학 내에서 지원되는 연구비가 公共的 방식으로 관리되는 일이 중요하고, 두번째의 것을 위해서는 교수사회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自律的 평가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번째의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나, 두번째의 문제는 우리 학계의 관행상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없이는 외부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요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의식할 때 더 늦기 전에 어떤 자율적 방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재 더 이상의 국가적 발전이 어려워가는 시점에서 우리 학계, 특히 인문·사회계는 우리 사회가 서 있는 역사적 시점에 대한 總體的反省을 하고 나아가야 할 방법을 지적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여기 위해서는 어떠한 강제로부터도 해방되어 있는 자유로운 사고와 연구가 가능한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동시에 연구수행의 책임감을 스스로 다할 줄 아는 분위기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